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신동화 간사 02-723-5302 hwa@pspd.org)

제 목 [논평]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집행 부당, 특검 도입해야

날 짜 2016. 10. 24. (총 2 쪽)

논 평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 부검의 필요성 정당성 없어

1. 경찰은 어제(10/23)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비록 유가족과 시민들의 반발로 강제집행은 무산됐지만, 영장집행 만료 시한인 내일까지 경찰은 강제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필요성도 정당성도 없는 부검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 명확한 사인을 밝히겠다는 경찰과 검찰의 부검 집행 사유는 이미 정당성이 없다. 부검 집행을 근거가 되었던 서울대학병원의 사망진단서는 동료 교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지어 대한의사협회까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3의 요인으로 내세운 ‘빨간 우의’ 또한 정밀한 영상 분석 결과 ‘빨간 우의’의 신체가 백남기 농민의 얼굴에 접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를 이유로 한 부검 집행도 정당성이 없어졌다.
3. 반면 경찰이 은폐하려 했던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에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더욱이 지난 10월 22일 방영된 SBS 그것에 알고 싶다 실험에서도 백남기 농민이 맞았던 물대포의 수압(14bar(2800rpm))은 강화유리를 산산조각 내고, 1.5cm

두께의 나무판자를 박살낼 정도로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목격자와 영상기록, 317간의 의무기록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의해 사망했음을 가리키고 있다.

4. 이런 만큼 경찰과 검찰의 부검 집행은 명분이 없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경찰이 반성은커녕, 강제부검을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 끝